

## 관 세 법

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

## 1. 「관세법」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미성년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·운영할 수 없다.
- ②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정부비축용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.
- ④ 특허보세구역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.

## 2. 「관세법」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,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.
- ㄴ. 납세신고, 자율심사 및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- ㄷ.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.
- ㄹ.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「관세법」 제38조(신고납부)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·징수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

## 3.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관계부처의 장은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, 품명, 규격 및 용도를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농림축수산물물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동종물품·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.

## 4. 「관세법」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관세법」 제217조(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)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.
- ②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다른 법령, 조약,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화주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.
- ④ 보세운송물품 중 분실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.

## 5.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-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④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## 6. 다음 「관세법」 조항에서 밑줄 친 각 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「관세법」 제98조(재수출 감면)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(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)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.

- ①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: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90
- ②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: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
- ③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: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
- ④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: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

## 7. 관세법령상 승객예약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세관장은 승객이 입·출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(승객의 입·출항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)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세관장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해당 승객의 입·출항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- ③ 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출항 후 3시간 이내이다.

8.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의 지정
- ②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
- ③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- ④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

9. 「관세법」 제93조(특정물품의 면세 등)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 
기증하는 물품
- ㄴ. 방산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  
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
- ㄷ.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·  
기구·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 
정하는 물품
- ㄹ.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, 통신시설, 해저통로,  
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

- ①  $\neg$ ,  $\sqsubset$   
②  $\neg$ ,  $\sqsupset$   
③  $\sqsubset$ ,  $\sqsubset$   
④  $\sqsubset$ ,  $\sqsupset$

10.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부와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이다.
- ②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.
- ③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- ④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법률의 공포일이다.

11.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법원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30일의 범위에서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.
- ㄴ. 심판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.
- ㄷ.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그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.
- ㄹ. 심사청구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.

- ①  $\neg$ ,  $\sqsubset$   
②  $\neg$ ,  $\supset$   
③  $\sqcup$ ,  $\sqsubset$   
④  $\sqcup$ ,  $\supset$

12.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소재지 및 면적, 구역안의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, 사업계획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설비가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.
- ④ 법인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없다.

13. 「관세법」상 견본품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세관공무원은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.
- ②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세관장이 견본품 반출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.
-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·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·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.

14. 다음 「관세법」 조항에서 밑줄 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「관세법」 제107조(관세의 분할납부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.

- ① 시설기계류, 기초설비품,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
- ②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
- ③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
-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

15. 「관세법」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크기의 과다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면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·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세관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「관세법」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부패·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6. 「관세법」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「관세법」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을 제외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②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.
- ③ 관세청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 「관세법」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.

17. 관세법령상 우편물(서신은 제외)의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 
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 
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 
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.
- ㄴ. 통관우체국의 장은 반송하려는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장이  
반송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 
내줄 수 있다.
- ㄷ. 우편물이 「약사법」 제2조(정의)제4호에 따른 의약품인 경우  
그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「관세법」 제241조(수출·  
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)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ㄹ.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출·수입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한  
경우에는 그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 
반송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- ①  $\neg$ ,  $\vdash$
- ②  $\neg$ ,  $\exists$
- ③  $\perp$ ,  $\vdash$
- ④  $\perp$ ,  $\exists$

18. 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천안세관장으로부터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세액의 징수를 위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관세청장은 ‘재조사 결정’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‘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’을 하려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- ④ 적법하지 아니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는 ‘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’을 한다.

19. 「관세법」상 통관의 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세관장은 「관세법」 제246조의3(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)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·불량·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.
- ②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(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가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(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)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해당 물품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되므로,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없다.

20. 관세법령상 매각하는 방법으로 관세충당을 하는 담보의 종류를 모두 고르면?

- ㄱ. 납세보증보험증권  
 ㄴ. 국채 또는 지방채  
 ㄷ. 보험에 가입된 등록된 건설기계  
 ㄹ.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
 ㅁ.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

- ①  $\neg$ ,  $\sqsubset$   
②  $\sqcup$ ,  $\sqcap$   
③  $\neg$ ,  $\sqcap$ ,  $\sqcup$   
④  $\sqcup$ ,  $\sqsubset$ ,  $\sqcup$

21. 「관세법」상 물품의 수출·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 표시유무·방법·형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그 물품의 선적지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②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「관세법」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- ③ 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·규격·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·번호·개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.
- ④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「관세법」 제246조(물품의 검사)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22. 「관세법」상 보호의 대상인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「디자인보호법」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
- ② 「식물신품종 보호법」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
- ③ 조약·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
- ④ 「실용신안법」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

23.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세관공무원은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,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,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지만,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세관공무원이 「관세법」에 따른 물품의 검사 등 납세자가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
- ③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,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관세조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,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4. 관세법령상 등록 등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,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ㄴ.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ㄷ. 월별납부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,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ㄹ.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, 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 $\neg$ ,  $\sqsubset$   
②  $\neg$ ,  $\sqsupset$   
③  $\sqsubset$ ,  $\sqsubset$   
④  $\sqsubset$ ,  $\sqsupset$

25. 「관세법」상 용어 중 수입, 수출, 선박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‘수입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.
- ②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, 그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경우는 ‘수입’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‘선박용품’인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·관리·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한다.
- ④ 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‘수출’에 해당한다.